

光日春秋

전 성 철



미국에는 지금까지 44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고, 다른 하나는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이다.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는 것, 즉, 실패한 대통령인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꿈은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터 대통령은 재선을 이루지 못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에 재선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지금까지 44명의 대통령 중 중임을 한 사람은 불과 18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떡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할까 노심초사한다. 자연히 국민을 두려워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게 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는 모든 나라들은 거의 ‘중임제’를 택하고 있다. 그것이 대통령중심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중임제의 가장 큰 장점은

초임 대통령으로 하여금 첫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임된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지 않을까? 아무래도 초선 대통령보다는 못하겠지만 이들은 정

막가파 대통령을 막는 개헌 필요

치력의 원숙함으로 그것을 보완한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이란-콘트라 사건이 있었고 클린턴의 경우 르노스키 스캔들이 있었지만 둘 다 원숙하게 그 위기를 다 넘겼고 통치를 잘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 단임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한마디로 대통령을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 단임제 대통령은 재임 중 아무리 인기가 없었어도, 국

민이 아무리 그를 미워하고 저주해도 그에게는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그의 업적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없다. 퇴임 후에는 전임 대통령으로 모든 예우와 대접을 다 받는다. 그러니 국민을 별로 무시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짓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는 태도, 즉 ‘막가파’ 대통령을 만들게 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 노태우 대통령이 재선의 희망이 있었다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몇 천억 원씩 먹

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재선의 꿈이 있었다면 아들 문제에 대해 그토록 고집을 피우지 않았을 것이고 말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만약 재선에 대한 꿈이 있었다면 ‘아들 문제’가 선거에서 불거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오만과 방심은 대부분 그들을 다 임기 후반에 가서는 지지도 10%대에 불과한 사실상 ‘정치적 파산자’

로 만들었다.

노무현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그에게 재선의 꿈이 있었다면 국정 내내 ‘막가파’ 스타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자체 선거에서 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당하고도 사과논커녕 ‘선거란 그럴 때가 있는 것이다’라고 태연자약하고, ‘코드 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어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안면 불수하고, 세금 폭탄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저항과 작통권 이양에 대한 열화와 같은 반발, 악화되는 대미 관계에 대한 크나큰 우려에 대해서도 모두 마이동풍 식으로 일관했었다.

이런 모든 것이 크게 보아 ‘단임제’라는 이상한 제도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단임 대통령제는 ‘막가파’ 대통령을 양산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미에 단임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을 시도하지 않았는가.

아예 우리 국민도 이만큼 당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헌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꾸는 것을 심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대학교수 잇단 시국선언 간과해선 안된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교수 124명은 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중앙대 교수들도 이날 67명의 이름이 적힌 시국선언문을 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연세대 등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 대표적 지식들의 잇단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들이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깊이 염려한다” “현 정권은 국민을 전방위적으로 감시·억압하는 21세기형 ‘빅브라더’로 변신, 민주공화국을 경찰국가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한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에 잘 나타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한 것이다. 위압적·권위주의적인 통

치와 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치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경고의 의미인 셈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일종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1960년 자유당 정권 붕괴를 촉발하고, 87년 6월 항쟁의 불을 지핀 것도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었다. 그만큼 대학교수의 시국선언이 국민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겠다.

현 집권세력은 교수들의 목소리를 흘려 들어선 안 된다. 일부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하고 ‘마이 웨이’해서는 국정 혼란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심을 아우르면서 국정운영 기초를 일대 전환시켜야 한다. 여당 내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작게 의원들마저 “작금의 민심 이반은 독선·오만에 대한 심판”이라고 비판할 정도가 아닌가.

정부·여당은 시대착오적 과오를 반성하고 근본적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할 때라는 교수들의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외유성 해외시찰이라니

지난달 31일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24명이 러시아로 해외시찰을 떠났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명박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박홍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오는 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사마르칸트 등을 돌며 천연가스 생산실태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아무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해외시찰이라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지금이야 어느 때인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북한 핵실험, 경제난 등이 맞물린 위기상황 아닌가. 이 같은 어려운 시국에는 계획된 일정이라도 잠시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실제로 상당수 지방의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명색이 시·도 의회의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지는 못할 망정 ‘아무 일 없는 듯’ 출장길에 오르다

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욱이 이들의 방문일정을 살펴보면 가관이다. 명목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실태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에 대한 비교시찰이지만 크렘린 궁과 차르박 호수공원 등 관광명소가 포함돼 있다. 말이 해외시찰이지 외유나 다름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외유가 각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노 전 대통령 추모와 관련해 각종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할말을 잃게 한다. 어찌 이리고도 주민들을 위한 의원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식견을 넓힌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온 국민이 비탄에 잠겨 있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외유라니 제정신들인가. 차제에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외유관행을 바로 잡길 바란다.



의료 칼럼

곽 형 준



젊은 여성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허리란 아픈 게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까지 생겨 허리 디스크 파열을 의심해야 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젊은 여성층의 허리 통증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에 이전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육체적 활동은 줄어든다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오게 된다. 이렇듯 허리 통증은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 아니다. 이 시기에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출산 후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고 중년의 나이에 고질적인 허리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젊은 20대의 허리는 아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허리 X-ray 및

여성 허리통증 관리 이렇게

다. 또한 습관적이고 무리한 다이어트와 운동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킬 킬(kill heel) 등 유행하는 하이힐을 장시간 신고 걷는 경우에도 발목 및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이 상태에서 빠게 되면 발목 염좌 및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통증 감소를 위한 치료를 해서 일단 통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허리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을 3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해서 치료 없이도 통증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젊은 20대의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몸매의 관리, 멋있는 하이힐이 될 수도 있지만 결혼 전 혼수 준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나의 건강한 2세와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20대부터 허리 건강을 챙기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시기에 허리 관리를 잘못해서 허리디스크가 1~2개 정도 심하게 손상된다면 출산 후의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평생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다.

〈동광주 우리병원 원장〉

매장의 예쁜옷들 큰사이즈도 함께 만들었으면

뽕뽕해서 좋을 건 없다. 물론 비만이 있으면 성인병도 유발하고 좋은 점보다는 여러 가지 나쁜 점과 부작용이 더 많으니 자랑할 건 못된다. 그러나 비만이라고 해서 숨기고 창피하게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홀대까지 받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비만이 있는데 옷을 사러 갈 때마다 불쾌하고 짜증이 안다. 요즘 옷 광고를 보면 ‘다 작게, 더 슬림하게’라는 게 패션계의 콘셉트인것 같다. 그러다 보니 큰 사이즈는 당연히 소외되고 옷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는 비만이 좀 있는 여성들은 누구나 느끼는 불만일 것 같다.

여성을 웃은 44. 55. 66, 77형태로 패있는 데 66 이상의 사이즈는 의류회사에서 아예

제작조차 하지 않거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이 적어 매장에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조금 맘에 드는 옷은 그 사이즈가 없고, 그나마 있는 사이즈들은 대부분 시기가 좀 지났거나 별로 맘에 들지 않는 제품들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속옷까지도 큰 사이즈 의류를 일반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에서 고르지 않으면 큰 사이즈 찾기가 너무 힘들다.

지나친 다이어트 때문에 청소년들 건강도 해치고, 대한민국 5명 중 1명이 큰 사이즈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의류 업체나 매장들의 태도는 너무 심하다. 큰 사이즈를 적당히 만들어주기 바란다.

▲남보라·광양시 도이동

기 고

이용 정



최근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유치해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양산마을을 다녀왔다. 이곳은 통일신라시대 명승 도선국사가 창건해 35년간 입적할 때까지 기거했던 옥룡사가 있는 전형적인 산촌 오지마을이다.

지난 2000년까지 58가구 147명의 주민이 벼농사와 밭 농사를 지으며 별다른 소득원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온 마을이다. 그러던 마을이 2002년 농촌진

농촌 테마마을 오세요

흥청에서 추진한 농촌 전통테마 마을 사업을 유치하면서부터 활기찬 마을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요즘 농업·농촌은 농산물시장 개방과 원자재 값 상승, 노령화 등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숙명적으로 가꾸고 지켜야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농업은 깨끗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 공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큰 공익적 기능이 있고, 농촌은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소중한 공간을 제공해 정서를 함양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식량 안보를 포함해 산술적으로 1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농촌에 깔려 있는 문화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한다. 잘 보존된 농촌 생활문화와 전통 양식을 발굴하고 잠재적인 자원을 녹색성장과 미래 전략사업으로 연계해 농가소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농촌 전통테마 마을이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목적은 농촌 마을에 깔려있는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끄집어내 이를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고

서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고사리, 취, 두릅, 더덕, 옻나무, 도라지 등 각종 산야채는 향이 뛰어나고 맛이 좋아 관림객과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었다. 또 도자기, 천연염색, 도선 선차 체험실 등은 학생과 관람객들의 교육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농촌테마를 체험하기 위해 매년 2만 여명에 가까운 도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에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3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농업문제는 현장에 있고, 문제 해결도 현장에서 해야 한다는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올 여름은 고향처럼 훈훈한 정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양산 전통테마마을의 민박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르면서 각박한 도시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을 체험해 보면 어떨까?

〈전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

영터리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강력 단속을

도시 사람들은 친환경 농산물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가격 정도는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챙겨서 사먹는다. 그래서 우리 같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은 힘을 얻고, 정말 정직하게 농약 한번 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

그런데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맑은 물에 흙탕물을 튀기듯 불법행위가 친환경농가들을 눈에서 파노물을 나게 한다. 얼마 전 일부 지역에서 12개나 되는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들이 영터리 인증을 하다가 적발됐더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것도 허위로 인증을 해주는 대가로 몇

억씩 돈을 받아 챙겼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들이 밥속을 채운 돈은 전부 다 친환경 농가들이 밥집을 설치가며 피땀을 쏟은 대가인데 그게 검은돈으로 바뀌어 날아간 것이다.

그런 영터리 인증기관이 이번에 적발된 12개 업체만 있는지,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도 나쁜 뇌물을 챙기며 가짜로 인증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월빙이 대세인 요즘 친환경농산물이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

▲주정완·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無 等 鼓

“GM에 좋은 일은 미국에도 좋은 일이다. (what is good for General Motors is good for the USA)”

제너럴모터스(GM)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지난 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수백억원의 혈세를 지원해 새로운 GM으로 살려내겠다면서 한 말이다. 국익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인 디트로이트 등 자동차 공업지대만 살리려는 ‘정치적인 선택’ 아니냐는 비난에 대한 대응이다.

이 말은 오바마가 처음 쓴 것은 아니다. GM 회장을 지낸 찰스 어윈이 1952년 국방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미국과 GM의 이익이 상충하면?’이라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당시만 해도 GM의 전성기였다. 미국 내 점유율이 50%를 넘던 때였다. 근로자들도 높은 임금으로 중산층 생활을 누리고 충분한 노후연금까지 보장됐다. 1908년 설립 이후 포드에 불과한 GM의 성공은 위기에 함께 왔다. 1920년대 대공황 시기에 다양한 가격대의 차종, 해마다 조금씩 디자인을 바꾸는 차별화

전략을 써서 도약에 성공했다. 1930년대 들어 포드를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등극했고, 신화는 1970년대까지 계속된다.

“자동차=미국”, ‘미국 차=GM’으로 통하던 등식은 1980년대에 깨진다. 일제 소형차와의 경쟁에서 시장 지배력을 잃으면서다. 성공 신화에 스스로 도취한 오만함이 독이었다. 석유파동 이후

기름 덜 드는 차를 찾는 소비자를 무시했고, 노조에 발목 잡혀 방만한 경영을 했다. 그 결과가 파산보호 신청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GM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할까? ‘아니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정부 지원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당할 수 있는 데다, 중국 등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나라의 역공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미국 경제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미국판 ‘정치의 경제개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김정주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盧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 F A X 222-4267 >	사 회 2 부 2200-692 < F A X 227-0118 >	경영지원국 2200-511 < F A X 222-8005 >	문화홍보국 2200-541 < F A X 222-0195 >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여론대정부 2200-679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제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진 부 2200-691		< F A X 02-773-9335 >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